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 현장답사기*

안청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 일본 관동군 731부대 생체실험 자료 전시관

서울에서 탑승한 비행기가 한 시간 반쯤 걸려 중국 하얼빈에 우리 일행¹을 내려놓자 곧장 택시를 달려 하얼빈 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본 관동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만행과 전시 범죄 죄상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731부대 진열관(侵華日本軍第731部隊罪證陳列館)을 찾았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관동군이 생체실험을 통해 전쟁용 화학세균 살상무기를 개발하던 731부대가 있었던 지역으로, 중국 정부가 일제의 비인도적 만행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 국가유적지로 전시해 둔 곳이다. 얼마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가 관동군 생체실험 부대를 떠올리게 하는 ‘731’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쓰인 훈련기에 탑승하고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되어 한국은 물론 피해 당사국인 중국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반일여론을 들끓게 했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다.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 731부대가 자행했던 독가스 사용과 세균전용 생체실험 대상에는 전쟁포로뿐만 아니라 반일·항일 활동가와 사상범, 생활범죄자, 심

* 이 글은 2013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기획·주관한 ‘열린강연’ 시리즈 “아시아시대 중심을 가다”의 3회차 주제, ‘아시아, 분쟁과 화해의 현장을 가다’(동북아 편)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일화로 필자가 책임 집필한 현장답사 기록을 수정·보완·가필한 것임을 밝힌다.

¹ 중국 동북3성 방문 공동취재에는 안청시(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아시아연구소)와 장세정(중앙일보 기자)이 동행했다.

지어는 불온으로 분류된 지역공동체의 주민까지도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곳의 자료와 전시물들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생체실험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상을 단적으로 증언해 주는 대표적 죄증(罪證)들로 꼽힐 만하다. 731부대의 세균전쟁용 생체실험은 일본의 내각과 육군성의 후원 하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제협약이나 전쟁포로에 대한 조약과 규정들을 어기며, 살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은 생명윤리에 반하는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하는 범죄 행위였다(서이중, 2013: 55-118). 이 생체실험의 대상에는 중국인, 소련인, 조선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관동군이 만주 지역에서 생체실험을 통해 세균전 무기 사용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실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1939년 8월부터 1945년 8월의 종전까지 6년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생체실험 대상자로 죽어간 희생자 수만 해도 최소한 3,600명에 달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러나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 생체실험과 세균전 무기 실험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1932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13년 동안 계속된 731부대의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인명 숫자는 적어도 5,000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진청민, 2010: 22).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식민통치하면서 하얼빈에 731부대를 설립하고, 세균무기 개발과 생산을 추진했다.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1936년에는 ‘일본왕의 비밀지령’에 의하여 731부대로 하여금 이곳 핑팡(平房) 지역에 대규모 세균실험 및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1938년에는 이곳에 부지 16만km²에 70개의 건물을 포함한 80개의 시설이 입지한 총넓이 6km²의 본부지역과 더불어 하얼빈 시내의 난동 주둔지, 야외실험장을 건설했다. 1943년에는 세균공장과 비행장을 지은 안다(安達)기지 등을 포함한, 거대한 규모의 ‘세균배양과 생산기지’를 세웠다.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1940년 이후 세균무기의 연구, 생산, 테스트장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서이중, 2013: 80-81에서 인용). 731부대와 관동군 헌병대에 의해서 ‘특별이송’ 대상으로 분류되어 법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비밀심문한 뒤 731부대로 이송하여 인체실험 재료가 된 사람 중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데, 여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731부대로 이송되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어’ 우리의 특별한 주목을 끈다(진청민, 2013: 61-65에서 인용).

731부대의 설치·운용 및 일본이 중국에서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사용한 사

실에 일왕 히로히토를 직접 결부시킬 수 있는 현존 증빙문서나 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 허버트 빅스(Herbert Bix) 교수는 만주사변의 참혹성과 잔인성에 대하여 히로히토에게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썼다(빅스, 2010: 405-413).

생체실험, 독가스 사용, 세균전 등을 담당한 관동군 731부대에 참모총장이 내린 지령들은 ‘원칙적으로 천황에게도 보여 주어야 했고’, 일왕 히로히토는 독가스 사용에 책임이 있었다.

히로히토는 1940년 중국에서 세균무기를 시험 사용하도록 처음으로 직접 재가했다.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기 전, 히로히토는 이미 화학무기 요원과 장비를 중국에 보내는 것을 재가했다.

독가스는 중일전쟁 기간 내내 히로히토, 대본영, 통수부가 철저히, 효과적으로 관리했던 무기다.

히로히토와 일본군 통수부는 미국 측이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양제국을 상대로 독가스를 사용하면 보복당할 것에 대하여 우려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연합국 측에 대해서는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쟁기술이 열등했던 중국 몽골 지역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규모의 독가스를, ‘천황과 대본영 통수부의 지휘 명령 계통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재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퇴 후 731부대의 자료들은 대부분 일본군이 도피하면서 파괴하거나 가져갔으며,² 나머지는 후일 미군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

² “1945년 8월 8일, 소련 홍군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자”...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731부대에게 철퇴 준비를 명령”하고, ... “철퇴하기 전에 장비와 시설들은 폭발시키고 문서와 자료들은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인체실험에 사용한 마루타들을 학살하고 시체를 불태워 일부는 땅에 묻고 일부는 쏘

다. 731부대 잔여 인원들 중 극소수가 소련군에 붙잡혀 그 중 12명의 일본군 세군전범들이 재판을 받은 기록이 1950년에 영어와 중국어로 출간된 바 있다. 일황은 무조건 항복 후 도쿄의 극동(極東) 국제군사재판소 법정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일본군 최고 지도자들이 침략과 공격 명령을 내린 전쟁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다’는 헌법상 논리가 인정되어 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후 “731부대 구성원들도 99% 이상은 전쟁재판을 받지 않았다.” 뉘른부르크 재판에서 나치의 생체실험에 관련된 독일 의사들이 단죄되었던 사실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미국과 ‘비밀거래’를 하여 731부대의 13년 연구성과 자료를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기소를 면죄받았다”고 진청민 교수는 썼다. 한편, 전후에 기소를 면제받은 731부대원들은 익명으로 “삶을 즐기거나 정치, 상업, 학술, 의학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사회 유명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인사들은 전우회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거나, 더불어 “비밀리에 『방우(房友)』라는 회보를 간행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731부대 유적지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폭파되어 일본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남긴 폐허의 모습이 돼 있다. 중국 정부는 1982년부터 일본이 남긴 역사유적 자료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시기에 남겨준 유적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람되고 있는 곳은 중국 전역에 31개가 있다. 일본군 731부대가 남긴 역사적 범죄 증거를 모은 ‘진열관’은 1985년부터 외부에 공개되었다. 2006년 중국 국무원은 이 하얼빈의 731 유적을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였다. 731 유적지를 찾는 참관인들 중에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들이 많다고 한다. 이곳을 찾는 일본인 중에는 학자들도 많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곳 하얼빈에 오기 전까지 731부대의 역사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들 말한다. 우리를 안

화강(松花江)에 버렸다.” 그리고 8월 13일에 “약 2,500명쯤 되는 제731부대의 인원들은 특수열차를 타고, 세군무기 개발·실험의 책임자 이시이 시로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출발하기 전에 이시이 시로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각 지부에서도 …’ 급급히 자료와 문서를 불태우고 시설과 장비들을 폭발시켰다.” … “기타 세군부대에서도 도주하기 전에 중요한 설비만 가지고 모든 기자재와 자료를 불태우고 건물들을 폭발시켰다.”(진청민, 2010: 29-30에서 인용)

내해 준 수위 한 분은 일본인들은 이 유적지를 관람하고 떠날 때는 “고개를 폭 숙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자주 보았다”고 말했다.

이곳에 와서 확인하게 된 일본군 세균전에 대한 역사문헌 자료들은 일본이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 여러 곳에서도 생화학 무기와 세균전 무기를 제작, 사용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사에 결코 망각될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후 오랫동안 ‘자료가 없다’는 구실로 731부대의 세균전 존재 사실을 부인해 왔으며, 비인도적 생체실험과 세균전 관련 자료들을 최근까지도³ 은폐하거나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중국인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적절한 보상 및 지원과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요청서 등을 요로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들의 ‘구제시책’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미나미 노리오, 2013: 133-145 참조, 145 인용) 일본은 이처럼 역사의 진실을 은폐한 채 과거사 청산을 거부함으로써 한·일, 중·일 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유태인 대학살의 원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태인의 무덤 앞에 무릎 꿇는 독일의 정치인들을 통해 오늘날 유럽연합의 주축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새삼 돋보이게 한다.

II. 동북공정과 한·중 역사 갈등

중국이 몇 년 전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던 한·중 간 역사왜곡 논란의 배경과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 진앙지이기도 한 지안(集安)⁴을 찾기로 했다. 찌는 듯 무더운 지난 7월 9일 장춘에서 지안으로 이동했다. 전날 늦은 오후 하얼빈 역에서 발 디딜 틈 없이 대합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 틈에서 장춘까지 오는

³ 일본의 작가 모리무라 세이이치(森村誠一)의 책 『식인마굴(食人魔窟)』(1981)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731부대의 죄상을 폭로한 바 있고, 2002년 8월 27일 ‘도쿄의 지방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731부대의 존재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진청민, 2010: 30에서 재인용)

⁴ 지안은 서기 3년부터 427년까지 425년간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다.

철도 승차권을 구입하느라고 길고 지루한 시간을 역사 안에서 땀 흘리며 보내야 했다. 장춘-지안 길은 버스로 움직이는 것이 편리한 길이라 해서 새벽 5시에 기상, 6시에 호텔에서 짜주는 도시락을 들고 장춘의 시외버스 터미널로 오니 일찍 나왔는데도 승객들로 붐볐다. 중국은 어느 공공장소를 가나 사람들로 넘쳐난다. 버스 터미널에 있는 작은 탁자 하나를 선점해서 아침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지안행 45인승 버스도 완전 빼곡하여 자리가 좁았지만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대로 참을 만했다.

6시간 30분을 시외버스에 시달리며 옛 고구려의 수도이던 지안으로 달렸다. 장춘에서 다섯 시간 이상 달려도 산 하나 안 보이는 만주 별판에는 옥수수 밭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안 도착을 한 시간여 앞둔 지점부터 산이 보이고 벼농사를 짓는 동네가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산천경개가 눈에 익숙한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꼭 한국의 한 지방 동네를 지나가는 느낌이다. 아하! 고구려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였구나! 하는 확신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지안에 도착, 호텔에 체크인 후 늦은 점심을 먹고 곧바로 거대하고 웅장한 광개토태왕비석 앞에 섰다. 눈 앞에 태산처럼 우뚝 솟은 비석은 고구려인의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태왕묘뿐만 아니라 주위에 늘어선 고구려 고분들은 우선 봉분의 크기에서부터 하나같이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엄이 흐른다.

중국은 2004년 7월 북한과 동시에 지안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각각 지정받는 데 성공하고, 지안에 서둘러 고구려 유적 박물관을 세웠다. 북한으로서는 첫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은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 절반을 다스리던 고구려 후기의 고분들과 개별 고분 약 30기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문화 유적이다. 이곳은 고구려 문화로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고대 장묘 유적의 아름다운 벽화로 유명하며, 고구려 시대의 왕을 비롯한 왕족, 귀족들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덤으로 당시의 문물과 생활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고분 안의 벽화들을 둘러보니 여름철 습기로 벽들에 심한 결로 현상이 보였고, 물이 흘러 소중한 문화유산들인 벽화에 군데군데 흠집이 생기고, 색깔이 바래 보였다. 하루속

히 한·중 두 나라 학계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정밀조사하고, 보존책을 강구하여 귀중한 문화유산 역사자료들이 제대로 보존, 연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2003년 9월 월간지 『신동아』가 중국 『광명일보』에 실린 “고구려역사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의 전문을 공개하여⁵ 중국의 ‘동북공정’을 알리면서, 그 속에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했다”는 논설을 실은 바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경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 한국에 알려지기로는 - 중국 동북 지역의 옛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해 추진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 사업이다. 이 시기 중 2003년에 중국은 고구려 수도였던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에 고구려박물관을 건립했다. 이 박물관은 3년 전에 이미 완공하여 한동안 공개되었는데, 2년 전까지 이 고구려박물관에는 ‘고구려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한다. 이 표기에 대해 북한이 반대하고 한국이 반(反) ‘동북공정’ 열풍을 일으키고 나서자, 중국은 (남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고 한국 측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내부 보완을 거쳐 2013년 5월 1일에 재개장하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란 말을 뺐다고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고구려에 대한 역사주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문제제기에 자극받아 한국 정부는 2004년 서둘러 고구려역사재단을 만들었고, 2006년에는 이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시킨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확대·재편하였다. 이로써 그 전까지 한·일 간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 갈등에 매달려 왔던 시대에서 한국은 바야흐로 중국으로부터 조여오는 역사주권 침식에 대한 위협에도 눈을 돌려 한민족의 북방사 찬탈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가야 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최근 『신동아』는 중국이 준비 중이라는 또 다른 역사공작으로 중국 측이 조선

⁵ 이 시론의 결론은 “중국의 역사자료만 ‘일방적’으로 인용해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이)니 (한국 쪽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시론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라고 편집자가 주석을 달았다(『신동아』, 2003년 9월호, 332쪽). 이 시론의 전문(全文) 번역은 333-345와 이정훈, “중국은 왜 고구려사를 삼키려 하는가,” 『신동아』, 2003년 9월호, 320-331 참조.

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청사공정(淸史工程)’으로 신청사(新淸史) 출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이정훈, 2013: 322-334). 청사공정은 중화민국이 ‘통일된 다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해 만주족 역사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청나라에 대한 공인된 역사서(新淸史)를 만든다는 작업이다. 중국은 지난해 신청사를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그 발간 시기를 올해나 내년으로 늦추어 발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신청사’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었다’고 기록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데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조선을 속국으로 표기하여 누락시키고, 조공국 편으로 옮겨 기록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 문제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자칫하면 -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날선 대립 관계에 있는 일본에 이어 - 한·중 간에도 역사왜곡 문제를 놓고 대립해야 하는 ‘역사 전쟁’에 당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은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하게 되었다.

지안의 고구려박물관 전시물과 설명은 중국의 중원과 고구려의 결합을 강조하며, 고구려 문화가 한(漢), 당(唐)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원(중국)과의 교류(결합)에서 생겨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한국사에서는 고구려가 중원 쪽에서 옛 고구려 쪽으로 내려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쪽에서 중국인, 이민족들을 몰아내면서 만주 쪽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이들을 물리친 사실은 박물관의 설명이나 전시물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고구려 왕과 귀족은 당나라 관리 복장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독자적 관등체제를 유지”했으며, 이곳 지안박물관에도 “소형(小兒), 대형(大兒) 등 고구려의 독특한 관직이 적힌 기와 조각이 전시돼 있다”고 했다. 전시관을 돌아보고 난 뒤의 소감은 지안박물관의 전시물과 설명과 해설 자료들은 관람자들이 하여금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쪽으로 교묘하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물관 앞에 있는 인민정부 청사 앞에는 고구려의 상징인 삼족오(三足鳥,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태양에 산다는 세발까마귀)를 조각해 놓고 “중국 고대전설에 등장하는 새인데, 고구려족과 중원(중국을 지칭) 민족이 같이 숭배했다”고 적혀 있다.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 지안박물관 안에 들어서면 제일 먼

저 지난 2012년 7월에 지린 성에서 발견된 지안 고구려비를 마주하게 된다. 이 비석은 2013년 5월 공식 개관한 지안박물관 1층 로비에 8각 유리관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에는 1.5m 정도로 떨어진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안 고구려비는 현존 최고 고구려 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비문 판독에 아직도 분분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일보, 2013/06/04). 지안박물관의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금세공이 아름다운 금속 장식물들을 비롯하여 토기문화에서 청동기, 철기시대로 옮겨가는 고구려 문화를 축약해서 보여준다. 험준한 산악지대와 추운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찍이 갑옷을 개발하고 눈 위에서 신을 수 있는 징 박힌 신발 등 고구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놓았다.

박물관 전시장의 어느 해설문에도 -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히도 -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부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연전의 역사 갈등 소동에서 한국 측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2013/05/02). 그러나 곳곳에 고구려의 생활상을 안내하면서 중국의 ‘중원과 같은 양식’이라고 표현한 곳이 눈에 띈다. 이 박물관을 찾는 사람의 다수가 한국인임을 감안하면 한글로 된 안내책자 하나 없고 한국어 해설사도 없어 중국의 인색한 관광 인프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중국인 안내인들이 붙어서 따라 다니며 감시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당시 수도 지역을 넓게 둘러싸고 있는 환도산성을 둘러보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자연석을 쌓아 올린 고구려식 산성이요, 주변 들판에는 고구려식 돌무덤들이 여기저기 늘어서 있다. 지금 이 성을 보수한다고 중국인 관리인이 나와서 사진도 못 찍게 한다. 조만간 이 성을 허물고 단동에 있는 호산장성처럼 만리장성식으로 바꾸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나 할까... 단동에는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고구려의 옛 박작성을 허물고 그 자리에 만리장성과 똑같은 양식으로 성을 쌓고 ‘호산장성’이라 부르며, 그 앞에 대문짝만한 입간판을 세우고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 표기해 놓았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의 민족적 단합과 국가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제다. 따라서 역사왜곡이나 유적 훼손은 민족감정을 부추기

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두 나라는 자의적 역사 해석이나 정치적 의도로 오해되기 쉬운 일방적 개발정책을 피하고 공평하고 진실한 역사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한국 측이 선호하는 제안과 중국 측의 입장을 잘 비교 검토하여 국적을 초월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동학술조사 및 유적·유물 복원과 보호를 위한 연구팀이나 한·중 역사 공동연구회 같은 학술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

오늘날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에 이어서 ‘만리장성 확장’ 방식의 신중국 단일 통합국가체제를 지향하고 있어 한국 정부나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기치는 55개의 중국 내 모든 소수민족들을 통일중국의 울타리 안에 재통합함으로써 ‘신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역사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려는 국가주의적 기획이다. 전 중국 13억 5천만 인민들로 하여금 중국문화 전체를 단일한 애국주의로 무장케 한다는 거대민족주의의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한족(漢族) 중심이요, 유가(儒家) 중심의 ‘국학’을 강조해 오던 중국이 이제는 다민족 이질 문화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중국식 통일문화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팽창적 “신중화주의”로의 전환이요,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 전략이기도 하다(윤휘탁, 2006). 사회주의 중화민국 국가기제가 앞장서서 통제하고 주도해 내겠다는 상명하달식(top-down) 국가동원과 영토팽창주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에 나서 국가정책으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세우는 ‘중화적 색채’와 ‘중국의 가치’를 높이려는 “국학을 강조하고 애국을 외치는…중국 내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푸단대학교 거자오광(葛兆光) 교수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여 가진 대담에서 일침을 놓은 바 있다(『조선일보』, 2012/11/28: A23). 지안에서 다시 상기하게 된 한·중 간 ‘동북공정’ 문제, ‘중국형 영토확장주의’를 둘러싼 논란 등 동북아 국가들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거자오강 교수의 대담 내용의 일부를 각주로 인용, 기록해 둔다.⁷

⁶ 고구려 유적의 보호와 문제점 및 그 보존 대책에 관해서는 고평의, “중국의 고구려 역사문화 관광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고구려 발해연구』 36집(2010. 3): 133-171 참조.

⁷ 『조선일보』, 2012/11/28: A 23에서 인용.

“한·중간 동북공정이나 만리장성 확장 논리에 대해서는…학계보다는 정부 주도에 의해 진행되는

세계는 바야흐로 다민족주의, 복합국가화를 지향하여 국경을 서로 허물고 영토주의 역사를 넘어 국가주권의 일부들을 포기하고 글로벌 가족으로 옮겨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통적 국가주권과 인종주의·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구세계적 영토 확장 개념은 이미 곳곳에서 퇴색하고 있다. 고착된 ‘고유’ 영토 개념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되는 대신, 국경을 초월하는 인적 소통 장치들,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초국가·초국경적 비정부국제기구와 조직들이 국제규범을 정하고 나라 간의 개별적 행동을 규정하는 사례와 영역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ingmar, 2012: 20).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대국주의, 군사주의에 안주하며, 바깥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두 나라가 권력 중심, 패권 중심의 과거 회귀형이 아니라 지구촌 시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와 아시아인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강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2년 전 106세의 중국 노학자 저우유강(周有光)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하여 “중국의 오만을 경계하는 쓴소리”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구촌 시대가 된 지금,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1/04/05: A34).

한·중·일이 ‘과거와의 투쟁과 역사전쟁’을 접고, 공존·호혜·공영할 수 있는 ‘착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길은 정녕 없는가를 자문하며 3박 4일의 짧은 중

일이다. ... 중국입장은 현재 영토를 가지고 과거도 이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과거 영토를 가지고 현재 영토에 대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학자에게는 세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협소한 입장, 즉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반드시 충분한 역사자료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

셋째, 논의가 역사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에 들어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학자가 아니라 정치논쟁가가 될 뿐이다.”

중국이 커지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중화주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과거 사대 외교나 조공외교 같은 부정적 경험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과거 한대 이후의 사대는 사실이지만 명대 이후 양국 문화는 분리되기 시작했다. 1644년 청이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 조선은 형식적으로 조공관계였을 뿐 문화적으로는 주체성이 뚜렷했다. 최근 일부 중국학자들이 말하는 중화중심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은 본래부터 다원적이었으며 이족문화와의 중첩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이탈릭체는 필자 추가)

국의 동북지역 여정을 접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III. 일본은 ‘좋은 이웃’이 될까?

도쿄에서는 소위 일본정신을 대표한다는 야스쿠니신사를 먼저 찾았다.⁸ 우리가 방문한 야스쿠니신사에서는 대동아전쟁 개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이 전시회를 보니 일본은 아직도 군국주의 시대를 기리며, 이른바 그들의 ‘대동아전쟁’을 성전처럼 간주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동아전쟁이 아시아 제국들을 서양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켰다고 선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는 일본의 승리가 민족해방을 시켜준 쾌거라고 칭송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와 의 대담에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알링턴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답했다(Foreign Affairs, 92, 2013: 3-4). 그의 생각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체실험 같이 반인륜적 인명 학살과 문명 파괴의 주범으로 처단된 1급 전쟁범죄자 13인들이 안치된 장소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국립묘지와 다를 바 없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이나 중국이 전범자를 기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야스쿠니를 나오면서 아베가 집권한 일본 정부는 아직도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의 군벌과 정치인이 조선을 강제병합하고 만주침공, 중일전쟁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들을 ‘침략 행위’였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의 영광과 자부심으로 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다시 군국화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과거 회귀형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필

⁸ 일본 취재여행에는 필자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최중호 박사, 중앙일보 장세정 기자 등 3인이 동행하였다.

자의 눈으로는 전쟁 관련 유물전시관 어디를 보아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진주만 공격을 인정하는 증빙자료는커녕 해설자료 하나 볼 수 없었다. 또한 유물전시관에는 전후 연합군 측의 전쟁범죄 처벌에 대한 도쿄 전범재판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자료도,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전쟁 중 성노예로 강제 동원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았다.

세계 초유의 두 원폭피해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둘러본 전시물과 안내 자료들에도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데는 역시 인색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피폭당한 후 1945년 12월 말까지 이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 수만 해도 각각 약 14만과 8만 명을 기록했다(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2011). 이들 중 최다수 희생자들이 군관계자, 시민, 전쟁 관련 동원노동에 징용되었던 군수공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었다. 이 안에는 물론 전쟁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강제징용되었던 많은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자탄 피해의 최대 희생자는 물론 일본의 시민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평화공원의 모든 전시물과 자료들이 한결같이 일본과 일본 국민은 예고 없이 급습당한 ‘전쟁피해자’요, ‘원폭의 희생자’로만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든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한글 안내물에는 “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는가?”에 대하여, “*전황이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종전 후(에) (미국이)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국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인 원자폭탄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다. 히로시마를 제1 투하 목표 도시로 정한 데 대해서는 “*유일하게 (히로시마에는) 연합군 포로수용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일본이 진정으로 전쟁이 가져다준 잘못된 역사의 전철에 대하여 반성하고, 전쟁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는, 진정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교훈을 새긴 전시장이기를 기대한 우리의 바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자료관을 나서야 했다. 과거를 통절히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평화공원’이라기보다는 선량한 (일본)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일본’의 부활을 꿈꾸게 만들려는 ‘애국주의’ 교육장, 그들만의 ‘평화공원’이라는 인상을 쉽게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망각증과 침략 부인 발언 등이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 일본행을 준비하면서 가져온 일본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히로시마 노트』(2012)를 여행길 틈틈이 읽으면서 ‘핵 없는 세계’와 원수폭폐지운동에 뜻을 두고, 현대 일본으로 하여금 평화헌법 고수, 과거사 반성, 천황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에서 거듭나는 나라로 개조하려는 꿈을 성숙하면서도 절제된 문학운동으로 가꾸어내는 현대 일본 사회의 양심과 마주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오에 겐자부로의 책은 무더운 한여름 지친 여정의 좋은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한국의 마스크를 통해서 일본이 과거의 침략을 시인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끼쳤다는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1995)를 지지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쿄에는 야스쿠니신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의 양심과 민주 시민 정신을 대변하는 세력들과 전쟁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위안부 자료전시관을 운영하는 여성운동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자들과 양식 있는 일본 여성들 중에는 일본의 전쟁에 동원된 성노예 여성들은 과거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담화(1993)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은 ‘본인 뜻에 반하는 형태로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과거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끼친 “고통과 손해를 준 것을 자각하고 반성하며”, 이에 대하여 “이후 교과서 기술 시... 배려한다”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관방장관의 담화(1982)를 일본과 한국의 많은 교육자들이 공감하고 고무되기도 했다. 우리가 방문한 도쿄 신주쿠 지역 와세다대학 인근에 있는 ‘전쟁·평화 여성자료관(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ww.wam-peace.org)’이 바로 그런 곳 중의 하나다. 이 전시관은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 시민운동가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씨가 작고하면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시민모금운동에서 힘을 보태 2005년에 개관한 위안부 관련 여성운동가들이 운영하는 전시 기관이다.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국 성노예제를 단죄하는 여성국제법정, 일명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

성국제법정'을 통해 수집한 피해 여성들의 증언과 참전 군인들의 가해 증언 자료 등을 모아 전시하는 곳이다.

우리는 이 전시장의 운영 실무 담당자 야마시타 후미코(山下美子) 씨의 안내와 전시물들에 대한 얘기로 한 시간 정도 보내며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성노예로 동원되었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모은 동영상 자료들과 기록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후미코 씨는 전쟁범죄의 현장을 방문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통해 피해자를 기억하고, 가해자의 정체와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후세에 전하는 여정은 멀고도 어려운 길이지만, 이 일은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러 나라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후원과 더불어 자료 지원 도움이 끊어지지 않아 힘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관의 관장이기도 한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⁹의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가 증언과 재판기록 등 수많은 증거가 새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고노 담화 발표 이후 20년간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강제연행을 직접 지시한 문서가 없다는 식의 궤변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목표는 단순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수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 사죄, 배상과 함께 관련 사실을 교과서에 기록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조선일보』, 2013/08/08).

최근 일본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일부 극우단체의 혐한(嫌韓)시위와 민족 차별적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여 '국제 네트워크' 운동이 결성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의 다수파가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침묵하고

⁹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일본의 위안부 관련 44개 시민단체가 전 세계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할 것을 유엔에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8월 14일은 한국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증언을 한 날이다. 김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 문제화되면서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이끌어냈다. 와타나베 미나 씨는 “이 날을 기념하여 김 할머니의 용기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념일 제정은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에도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녀는 “올 들어 일본 내에서 위안부를 부정하려는 발언이 속출하면서 유엔 차원의 기념일 제정 필요성이 더 절실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3년 8월 8일자 기사 참조).

있는 사이에 ‘재일한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인종 편견적 언동이 시위현장과 다양한 미디어로 확산되고’, ‘특히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독과 증오 표현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수준에 달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민족이나 국경을 넘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¹⁰

물론 수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들 양식 있는 일본인들이 곳곳에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 세력이 커진다면, 언젠가는 일본이 역사 앞에 엄숙히 고개를 숙일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솟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일 중의 하나는 이들 ‘착한 일본인’들을 더 많이 찾아내어 그들과 손잡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좋은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일임을 새삼 느꼈다.

이처럼 일본의 시민적 양심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과 괴리되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착한 일본’이 우리와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 잡게 되기까지는 꽤 어렵고 앞길이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오늘의 일본 정치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현 정권은 우파 내셔널리즘 돌풍을 부추기며 격변하는 동북아에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새 일본의 등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이요, 한국 외교의 난관은 아베 정권 집권 후 지난 한 해 동안에 일본의 재무장이 가능하도록 평화헌법을 개정, 또는 재해석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집착해 온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그 우산 아래 안보를 도모하고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평화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군사대국화를 도모하는 일이다.¹¹ 미·일 관계에 대하여 아베는 “미·일동맹은

¹⁰ 이 단체를 주도한 인사들 중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등이 있다(『조선일보』, 2013/09/26: A31).

¹¹ 아베 정권의 집권 아젠다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Foreign Affairs*(2013)에 실린 대담록 전문을 참조.

100%로 믿을 수 있는 신뢰 수준이다”라고 공언한다. 그리고 급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그 위협에 겨냥하여 미·일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일본은 미국의 대아시아 재균형정책(rebalancing)을 지지하고 방위비 증액 등 책임을 다해 미국을 돕고 나서겠다(*Foreign Affairs* 92, 2013: 5)고 약속했다. 그리고 전임 일본 수상들이 머뭇거리며 결정을 미루어왔던, 미국이 중국 견제를 계산에 두고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에도 일찌감치(2013년 4월에) 참가하기로 결정해 미국 손을 들어주었다. 나머지 과업으로는 일본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국방비 증액과 자위권 발동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국내외에서 지원하고 정당화해 줄 이유와 명분이다. 집단자위권 발동을 뒷받침할 헌법 수정 또는 재해석이 필요함을 미국 측에 꾸준히 설득하여 2013년 10월 3일, 미·일 양국 외교 국방장관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냈다. 헌법 개정과 집단자위권 발동에 대해 일본 국민 50%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지지도도 아베에게 자신감을 실어주었다. 이제는 평화헌법 개정(또는 재해석)의 실행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불행하게도 아베의 일본은 이 계획의 실행을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관은 철저한 현실주의를 일본식 수사학으로 포장한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이다. 이 노선에 따르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중국을 침공하고, 조선의 자주권을 탈취하여 오늘날까지도 남북 분단의 족쇄 속에 분열된 한국인으로 갈라놓은 책임을 상기하고 사과하는 일쯤이야 아베 정권의 시각에서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현재 일본은 아베 정부가 공언하고 추구해 오던 ‘종합선물 보따리’를 국제사회로부터 거의 다 받아 챙긴 셈이다. 이제 아베 정권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인정 약속을 받아내고, 헌법 9조의 개정을 포함한 헌법 재해석에 대한 명시적 지지 표명도 받아냈다. 미국을 따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몇몇 주요국들로부터도 이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¹² 여기에는 나라별로 각자 나

¹² 여기에는 영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세안(ASEAN) 10개국들도 포함되었다.

름의 국가이익관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모습과 계산들이 작용한 것이다.¹³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준다는 것은 미·일 간의 집단자위권 발동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만약 남북한 간에 돌발 상황이나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중·일 간 동북아의 “세력 구도가 재편되는” 국면, “동북아 군사·안보 정세의 지각 변동”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한·미·일 3각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적 선택을 재촉받는” “비상(非常)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조선일보』, 2013/11/22: A3-4, 35).

급변하는 작금의 세계에서 인류는 우주 속 지구촌의 생명체들을 보전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핵전쟁을 비롯한 각종 위협 징후군들로부터 구해내야 하는 ‘시간과의 투쟁’과 마주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와 민족들이 먼저 서로 돕고 존중하며, 화해하는 이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다. 차제에 동아시아에서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한발 앞서 입헌민주주의를 선취했던 일본이 아직까지 지도적인 기여국가로 존경받지 못하고, 과거 지향적 궤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이번 여정에서 재확인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본, 과거와 ‘화해하는’ 일본, 미래를 더불어 ‘책임질 수 있는’ 일본, 지구촌을 위협해 오는 ‘시간과의 투쟁’에 동참하는 일본으로 새 출발 하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일본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 정부와 양식 있는 일본 시민을 싸잡아 하나의 ‘일본’으로 비난하는 한 우리는 일본

¹³ 미국은 구명 난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의 경찰’ 역할에 드는 막대한 돈을 일본이 일부 기여하겠다는 제안에 일찌감치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EU도 군사력 비용 축소에 따른 부담을 일본이 대신 떠맡겠다는 데에 아베를 지지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이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개념을 내세워 더 많은 경제협력 자금이란 선물과 동시에 급팽창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도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계산 하에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등의 배경에 대한 분석들이 언론의 시각으로 보도되었다(『조선일보』, 2013/11/21: A23 참조).

내의 지한파들까지도 놓치게 되고 말 것이다. 일본과 손잡고 ‘이제는 아시아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며 통일한국, 서로 ‘죽이지 않는(NonKilling) 평화한국 만들기’ (Paige and Ahn, 2012)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일본 만들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이를 하나 둘씩 실행에 옮겨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국익을 다시 정립하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민·관(民·官) 두 차원에서 각각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변혁기의 국제정세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혜안을 가진 리더십도 절실하다.

IV. 압록강가에서 본 북녘땅: 동북3성을 한국의 북방외교 교두보로?

헤이룽장 성(하얼빈), 지린 성(장춘), 랴오닝 성(선양) 등 동북3성이 위치한 만주 지방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누구나 이 중국 땅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삶, 그 영광과 애환이 녹아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놀란다. 필자가 1990년대 초 처음으로 본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나라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주 지방을 여행하며 본 몇몇 도시들은 경제개발이 막 시작되는 전형적 후발국형 도시 모습이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30년 후 오늘의 동북 지역 주요 도시들은 첨단도시형 건설공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도시와 도시, 지역과 도시를 잇는 도로공사도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과 호혜 관계를 함께 열어가는 희망의 경로를 생각해 보며, 지안박물관 일정을 마치고 지안에서 북한 땅과 맞닿아 있는 압록강변으로 나갔다. 유유히 흐르는 강 넘어 북한의 만포시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중국 쪽에는 위용을 갖춘 현대식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닌다. 그런데 강 건너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녘 쪽은 민둥산에다 전시용 빈집들만 몇 채 썰렁하게 서 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낡아빠진 시멘트 공장 하나가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썰렁하게 서 있다. 지안으로 오는 버스에서 만난 82세가 됐다는 한 중국인 노인장의 얘기가

떠올랐다. “북한의 산은 모두 나무 한 그루 안 보이는 민둥산이야. 저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안 해!” 그 노인의 입에서 환경보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놀라웠지만 - 아마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강조한 모양 - 그렇게 한마디로 매도당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화도 나고, 가슴도 아리다. 나라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 핵무기에 올인하는 북한 정권! 이들을 중국식 경제체제를 모방할 만한 수준까지라도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십수 년 동안 동북3성은 도시화, 산업화, 도시 인프라 구축, 교통, 통신 등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발전하고 시장화가 재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동북3성은 인구 1억을 가지고 있다. 하얼빈, 장춘, 선양은 수많은 승객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역사(驛舍)들, 자동차들로 넘치고, 건물과 길거리가 사람들로 넘쳐난다. 3년 전 백두산을 오르는 길에 지나간 만주 지역의 도시와 도로 풍경들과도 많이 달라진 근대화된 중국의 모습을 이번 길에 다시 확인했다. 이처럼 급속히 부상, 발전하는 동북3성을 남북한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갈등의 화해와 평화의 배후지로 발전시키는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여행에서 돌아왔다.

돌아보면 동북3성은 청나라 말기 일찍이 공업화가 시작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또한 청일전쟁 후 일제 침략의 만주국 시기에는 일본의 전쟁 목적을 배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에 의해 중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공업화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도 한동안 구소련의 원조에 힘입어 중공업 분야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던 지역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축이 연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견인하던 중공업 기지로서의 동북 지역은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 낙후된 공장 지역으로 뒤떨어져 갔다.

중국 정부는 침체된 동북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동북진흥전략은 낙후된 동북 지역을 재건해 지역균형을 실현하고 중국의 중공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 지역을 신형 공업화 기지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체제 개혁, 산업구조 조정,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등에 박차를 가했다. 동시

에 취업과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기업의 사회적 기능 분리, 재정과 세수, 투자시스템 개혁 등 관련 정책을 개혁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도모했다. 지역 범주도 동북3성뿐 아니라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동북지역까지 포괄하는 동북지구(3성 1구)로 확대하여 지역 간 및 도농 간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했다(김부용·임민경, 2013: 4-5).

동북진흥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정보 인프라의 건설을 확충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교통 인프라는 철도 및 도로교통망을 강화해 연해지역 연계 및 도시 간의 통로를 건설하고, 하얼빈-다렌, 선양-단둥, 단둥-다렌, 베이징-선양 간의 여객전용 노선을 완성하여 동북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했다. 국제 여객 철도노선으로 ‘중국-러시아’ 철도와 ‘중국-몽골’ 국제대통로를 건설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동북 지역 도시 간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노후된 도로를 보수해 운송여건을 괄목할 만하게 개선하였다. 기타 항구 인프라의 수준과 에너지 인프라의 다원화, 정보화 기술의 보급 확대도 급속하게 진행됐다. 동북진흥전략이 실시된 지난 10년 동안 동북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무역과 외국인 투자, 소비 면에서도 전국 수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유제 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민간경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전성을 회복해 가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전략은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대외 연계형 지역 발전 전략을 강화하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김부용·임민경, 2013: 8-9, 17-18). 이 지역의 현 단계 대외개방 확대 계획은 외자 유치와 주변국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목표에 큰 비중을 두고 지역별로 특화된 정치경제 및 자원지리적 연계와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헤이룽장 성의 대외개방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동북 지역과 극동 시베리아 간의 지역을 잇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린 성은 창지투 선도구 개발 지역으로 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요충지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그 안에 창춘, 연변 자치주, 훈춘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과 개방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훈춘은 북한의 라진, 선봉을 연결해 동해로 나가는 창구로서 중국 측이 중요성을 두고 있는 곳이다. 랴오닝 성 대외

개발 전략의 핵심은 동북 지역 최대 항구도시 다롄을 중심으로 북한의 신의주와의 연계를 고려에 두고 그 중간의 도시들인 단둥, 진저우, 잉커우, 판진, 우루다오 등 6개 도시를 잇는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 지역 개발과 대외개방 정책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 극동지역 개발 정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총연장 4,300km의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중 동북3성이 위치한 곳의 두 나라 간 국경선의 길이가 거의 3000km에 걸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선 문제에서 충돌과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약을 체결했다. 푸틴은 중국 동북부 지역과 접경 지역이자 낙후된 극동 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곳을 아·태경제권에 편입시켜 경제 진흥과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책과 노력을 활발하게 펴고 있다. 푸틴은 2012년 취임과 동시에 극동개발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하며, “이제부터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Hong, 2013: 21-22). 여기에는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염두에 두고 대 중국 협력을 활용 또는 편승하고, 다른 일면으로 중국이 나진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는 것에 대처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홍현익, 2011: 2-25). 2013년 3월 말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Far East)과 바이칼(Baikal) 지역 종합개발계획(12개 분야에 걸쳐 23개 종합투자사업)을 승인하고, 2025년까지 이 지역의 사회경제 생활수준을 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대한 장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포했다. 이 계획안에는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국제협력 중심센터로 중점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Baklanov, 2013: 15-17; Vaslavskiy, 2013: 33-38 참조). 이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동북아 국가들의 국제협력 중심지대로 부상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동북부 지역, 한국과 북한, 일본 등은 자연스럽게 이 국제협력 고리의 중심축을 구성하며 교역 및 투자활동의 축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 지방 개발 및 대외개방 확대 플랜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 발전계획과 함께 활성화되는 경우 동북아시아는 경제교류와 개발협력에 대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중국의 동북3성은 중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센터로서도 관련 국가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비교우위를 잠재적으로 가진 곳이어서 더욱 그 장래가 밝은 편이다. 자원, 에너지, 교역, 교통·통신, 금융 등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소)지역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낙관적 견해들도 있다.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발전과 대외개방에는 - 특히 인프라 건설 면에서 - 한국, 일본 등과의 경제교역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을 각각 개발하는 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 동북3성은 경제적 이득의 경로도 되지만, 그보다도 대 북한 교류 및 화해 조성을 위한 우회투자 경로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남과 북, 동북3성과 극동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선순환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과 러시아 간에 논의되어 왔던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파이프와 (남·북한·러시아를 잇는) 철도 연결 등 3각 협력 사업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등의 장애에 부딪치며 지지부진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들이 지난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박·푸틴 정상의 회담으로 다시 분위기가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함께 북한도 대화를 강조하는 등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도 남·북한·러시아 3각 협력 사업에 보다 유연한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 한·러 정상 회담으로 러시아가 추진 중인 북한 나진항 개발과 나진-하산(러시아) 철도사업에도 MOU가 체결되는 등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때문에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노력과 배려를 기울여야만 기업들의 사업 추진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시아(극동지역) 3각 협력과 남·북·중국 동북(3성) 간 3각 협력을 둘러싸고 과거 어느 때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북한 역시 남쪽 한국과 대화 및 긴장 완화를 바라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과 동북3성 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그 연계가 러시아의 극동까지 이어진다면 동북아 평화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북3성은 러시아, 몽골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정치·지리적 이점을 지닌 곳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장래에 있어 동북3성이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재평가하고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평화를 창출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데는 불안정한 동북아의 역학구조 속에서 어떤 비전이 필요한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한국 경제는 내일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심화되는 불평등 시장구조도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 남북관계 정상화에 희망을 걸고, 북한의 개방에서 우리 경제의 새 장을 열어줄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일각의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창조적 외교력을 발휘하여 동북3성을 한국 경제의 발전과 북방 외교의 새 돌파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3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참고문헌

- 고광의. 2010. “중국의 고구려 역사문화 관광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고구려 발해연구』 36, 133-171.
- 김부용·임민경. 2013.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중국성별 동향 브리핑』 4(7). 대외경제연구원.
- 미나미 노리오(南典男). 2013. “중국의 유기(遺棄)와 화학병기 피해 문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SSK 노년의 생명(윤리) 정치포럼’(2013. 10. 30),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33-145.
- 빅스, 허버트(Bix, Herbert) 저, 오현수 역. 2010. 『히로히토 평전: 근대일본의 형성』. 서울: 삼인.
- 서이중. 2013.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의 생체실험의 실험대상자 동원과정과 생명윤

- 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SSK 노년의 생명(윤리) 정치포럼’ (2013. 10. 30),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77-118.
- 오에 겐자부로 저, 이애숙 역. 2012. 『히로시마노트』. 서울: 삼천리.
- 윤휘탁. 2006. 『신중화주의: ‘중화민국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서울: 푸른역사.
- 이정훈. 2003. “중국은 왜 고구려사를 삼키려 하는가.” 『신동아』 9월호, 320-331.
- _____. 2013. “조선은 청나라 속국’…중국의 역사공작 ‘신청사’를 고발한다.” 『신동아』 5월호, 322-334.
- 진청민(金成民) 저, 하성금 역. 2010. 『(제731부대의 진상을 파헤친)일본군 세균전』. 서울: 청문각.
- 진청민(金成民). 2013. “역사와 현실, 일본관동군 제731부대의 전시범죄와 전후영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SSK 노년의 생명(윤리) 정치포럼’(2013. 10. 30),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74.
- 홍현익. 2011.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JPI 정책포럼』 7월호, 1-27.
-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2011. 『히로시마 원폭피해의 개요』.
- Baklanov, P. Ya. 2013. “Geographical and Geopolitical Factors and Directions of Long-term Development of the Pacific Russia.” 국제문제연구소 외 주최 국제회의의 발표논문집 『러시아 극동개발과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5-17.
- Foreign Affairs. 2013. “Japan is Back: A Conversation with Shinzo Abe.” *Foreign Affairs* 92(4), 2-8.
- Hong, Sun. 2013. “Chinese Northeast Development Plan and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Plan in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ntext.” 국제문제연구소 외 주최 국제회의의 발표논문집 『러시아 극동개발과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9-23.
- Paige, Glenn D. and Chung-Si Ahn. 2012.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Ringmar, Erik. 2012. “Performing International Systems: Two East-Asian Alternatives to the Westphalian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66(1), 1-25.
- Vaslavskiy, Yan. 2013. “Current Status of the Russian Far East Development Plans: A Macro-View From Moscow,”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외 주최 국제회의의 발표논문집 『러시아 극동개발과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3-38.

- 『문화일보』, 2013(6월 4일).
- 『조선일보』, 2011(4월 5일). A34, 최유식 특파원 칼럼.
- 『조선일보』, 2012(11월 28일). A23.
- 『조선일보』, 2013(5월 2일).
- 『조선일보』, 2013(8월 8일).
- 『조선일보』, 2013(9월 26일). A31.
- 『조선일보』, 2013(11월 21일). A23.
- 『조선일보』, 2013(11월 22일). A3-4, 35.